

# 7·12 무장 간첩 사건 발견 이후 남북 경협 동향

임을출 / 한겨레신문 정치부 북한전문기자

**지** 난 7월 12일 북한의 무장 간첩 침투 사건 등 잇단 도발 행위가 남북 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새정부의 정경 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 경협은 확고히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또 현장의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을까.

동해안 묵호 앞바다에 북한 무장 간첩의 시신이 발견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북쪽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를 받아내지 못했다. 북한은 잠수정 사건 때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시인과는 달리 이번에는 침투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전 정권 같았으면 기업인들의 방북은 물론 사업 협의를 위한 북한 인사 접촉까지도 불가능했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 '정부', 북한 도발 불구 남북 경협은 기업 자율 우선 방침

다행히 현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기 이전이라도 남북 경협은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확고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하고 있다. 과도기적인 남북 관계와 북한의 이중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되 정경 분리에 따른 남북 경협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사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해 기업들의 본격적인 대북 투자 실행은 좀 더 미룰 것을 권장하고 있다. 투자 실행 단계 이전의 사업 협의를 위한 방북이나 접촉, 사전 준비 등은 가능하나 투자 접행은 북한의 사과가 나온 뒤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에 열린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경 분리 원칙을 유지해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민간 기업인에게 권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일단 민간 차원의 대북 경제 협력이 연기 또는 유보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나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 정부가 이처럼 '권고' 수준의 나소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정경 분리 원칙에 따른 대북 교류 협력 활성화'라는 대북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고육지책에서 비롯된 것

이나, 정부는 또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 판단에 맡기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이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할 경우 대북 교류 협력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정부는 현 남북 상황을 기업들이 잘 이해하고, 기업들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의 속도를 조절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잇단 도발에 대한 시인 및 재발 방지 약속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유보시킬 명분은 없으며, 기업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 남북한 당국 경협안 정경 분리 원칙 고수

어쨌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부가 막아서 경제 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은 사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남쪽 기업인들의 북한 인사 접촉이나 방북, 다양한 사업 논의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북쪽 관계 당국이 보내오는 대남 경협에 대한 메시지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전향적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 7월 27일 예정대로 두레마을영농조합(대표 김진홍)의 북한 나진합

작농장 운영 및 계약 재배 사업에 대한 남북 협력 사업을 승인했다. 1999년부터 향후 15년 동안 북한의 함북 나진시 신흥동을 사업 장소로 실시될 이 사업은 남북 양측이 299만 달러씩 모두 4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농업 분야 최초의 농장 협력 사업이다. 두레마을영농조합은 북한의 과선경제협조회사(대표 신문순)를 상대로 씨감자 생산과 공급을 위한 합작 농장 10만 평을 운영하는 한편, 1,000만 평에 계약 재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 재배의 경우 비료, 농약 등 국내의 영농 자재를 북측에 공급한 다음 재배한 잡곡·특용 작물 등을 국제 시세로 사들여 국내에 반입 또는 수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1994년 11월 '남북 경협 활성화 조처' 이후 총 34 개 기업이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았고 9 개 기업이 협력 사업 승인을 받아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8월 6일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 현대상선·현대건설과 금강개발산업이 협력 사업자로 지정했다. 현대쪽은 관광선 운항, 관광 기반 및 편의 시설 설치 운영,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위해 북쪽 아태 평화위쪽과의 합영 혹은 단독 투자 형태로 모두 9,6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관광객 규모와 관련해서 현대쪽은 올해 매주 2,000 명, 내년부터는 하루 1,000 명씩, 연 30만 명 정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방북실무단은 7월 28

일부터 8월 4일까지 두번째로 방북해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쪽이 각각 50%씩 출자해 합영 회사인 '금강산관광개발회사' (가칭)를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서 초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한일합섬은 8월 3일 대북 신규 투자와 현재 진행 중인 방적 부문의 임가공 사업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대북경협단을 파견했다. 박창근 의류사업본부장과 기술자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일주일 정도 평양에 머물면서 현지 임가공 공장을 방문해 북쪽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 지도와 최신 설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외 방적, 신발 등 경공업 분야의 사업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관련 중소기업과의 동반 진출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섬유 관련 최신 임가공 설비 제공과 관련해서는 평양 임가공 공장의 전압이 불안정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합섬은 지난 1995년 정부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봉제·방적 부문 섬유 업계는 타업종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대북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편이다. 북한에 대한 유류 설비 이전과 임가공 사업 등을 통해 불황을 적극 타개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섬유산업연합회는 노후화된 채 방치돼 있는 생산 설비를 북한 지역에 이전해 임가공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업계를 대상으로 북한

진출 가능성을 탐진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섬유산업연합회는 정부가 북한으로의 설비 이전 방안과 운송비 및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준다면, 대구 지역 등의 상당수 업체가 유류 생산 설비 이전과 대북 임가공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북한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겨울 의류를 지난 8월 1일부터 全店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의류는 북한의 조선은화무역총회사에서 만든 롱코트, 하프코트 등 2억 원어치 상당으로 신세계는 자사 상표(PB)인 '샤데이'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판매 가격은 비슷한 품질의 국내 상품의 절반 수준으로 패딩 하프코트는 12만 9,000 원, 핸드메이드 자켓은 9만 9,000 원선에 판매하고 있다.

### 두드러진 중소기업 위주의 공동 대북 진출 움직임

기업인들의 방북 움직임은 현대를 제외하고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쪽이 단연 활발하다. 이는 북한 관계 당국이 투자 규모보다는 실제 투자 이행력이 높고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중소기업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30여 명이 북한측으로부터 조만간 초청장을 받아 8월 말 방북할 예정이다. 북한의

광명성경제연합회로부터 최근 초청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초청장이 도착하는 대로 이미 선정 작업이 완료된 업종별 30 개 중소기업체 대표들과 박 회장 등이 방북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잠수정 침투 사건 등 악재가 겹쳐 방북 문제가 미뤄져왔으나 광명성경제연합회 측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초청장을 보낼 것이라는 연락을 전달받은 상태다. 기협중앙회는 지난 1월 이후 업종별 협동조합과 개별 기업으로부터 모두 93 건의 대북 사업 계획서를 접수받아 북한측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오는 9월 24일부터 3 일간 유엔공업개발기구와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리는 북한 나진·선봉투자유치설명회에도 적잖은 남쪽 기업인이 나진·선봉경제특구를 방문해 투자 환경을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서울투자진흥사무소는 이 설명회에 한국 기업 100 개사를 선정해 방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 북한이 UNIDO를 통해 몇개의 한국 기업을 받아들일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UNIDO를 통한 투자유치설명회가 실제로 성과가 미약하고 실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UNIDO는 방북 기업을 상담회에 직접 참가할 50 개사,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훈춘에서 열리는 훈춘투자박람회에 참석했다가 24일 하룻동안 나진·선봉치대를 둘러보는 50 개사로 나눠 한

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 주목되는 중소기업연합체의 나진국제무역센터 추진 움직임

이밖에 주목되는 것은 남북한 기업이 최초로 나진·선봉경제특구내 한국 기업 50여 개를 입주시킬 복합 상가 형태의 무역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극심한 내수 시장 위축 등으로 급격히 줄고 있는 남북 교역 현실을 감안한 타개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특히 남북한 당국 모두 공정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여 개 국내 대북 교역 전문 중소 업체로 구성된 한민족물자교류협회(회장 김영일)와 북한 라선경제협조회사(대표 신문순) 사이에 지난 7월말 나진·선봉 현지에서 체결한 '나진국제무역센터건립 및 한국 기업유치계약서'에 따르면, 남북한은 우선 70만 달러를 들여 센터를 건립한 뒤 앞으로 25년간 센터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구체적인 입주 및 투자 상담은 UNIDO 주최 행사 외는 별도로 다음달 26일부터 나흘간 현지에서 남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150여 동포 기업만 참여하는 '나진·선봉개발후원의 날' 때 이뤄진다. 나진시 중심지 1만 m<sup>2</sup> 대지에 들어설 4층 규모의 무역센터는 정부로부터 협력 사업을 승인받아 이르면 내년 3월 완공

될 예정이며, 1층 면세점을 비롯해 각종 도소매점, 2층 국제회의실, 종합봉사센터(사무나, 식당 등), 3층과 4층에는 사무실이 들어서게 된다. 북쪽은 이 센터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최소한 50여 남쪽 기업의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며, 남쪽 입주 기업들은 면세점 등을 통해 국내산 각종 전자·파혁·섬유 제품과 잡화를 들여가 북한 시장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상인들을 겨냥하여 판매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또한 남쪽 기업들은 센터에 입주해 있으면서 각종 투자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나진·선봉특구내 행정경제위원회, 무역국 및 관광국,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인민은행 등은 센터내 남쪽 입주 업체들의 편의를 돋기 위해 장기거주증과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고 재산권·영업권·투자금에 대한 절대적 보호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9월중 독자적으로 30여 개 중소기업 중심의 방북단을 구성해 나진·선봉경제특구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9월에는 기업인의 방북 러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에서 언급한 각 단체가 모집한 한국 기업 모두가 나진·선봉을 방문할 수 있을지도 역시 북한의 초청장 도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편, 현대건설이 대북 협력 사업의 하나로 북한 건설 인력을 활용한 남북한 공동의 제3국 건설 시장 진출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건설 업계도 북한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형 건설 업체들은 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해외 공사 현장에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근로자들로 대체한 상태지만, 언어 소통 문제와 문화적 갈등 등으로 인해 노무 관리에 적잖은 애로를 겪고 있다. 태국과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국적이 주류를 이루는 동남아 근로자들은 월평균 급여가 기능과 숙련도에 따라 200~400 달러 수준이지만,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할 경우 이 정도의 급여 범위 내에서 충분히 동남아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순수 경협은 여전히 탐색 수준

그러나 지금까지 순수 경제 협력 분야 협력 사업 승인 또는 그 이전 단계의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 가운데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는 극히 제한적이다. 수익성이 있는 중장기적 순수 경협 분야보다는 오히려 일회성이거나 지원 성격이 강한 농업, 의료,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의 남북 협력 사업이 더욱 순조로운 진척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続